

# 천차만별 동물병원 비용 체계적 정비 절실

### 병원별 건강검진 3배 차이에 중성화수술은 보험 안돼 '부르는게 값' 인식 펫보험 가입 어렵고 제한적 혜택 불만 높아...항목별 진료비 게시 등 필요

#.김모(33·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최근 침대에서 뛰어내리다 앞 다리가 부러진 반려견을 데리고 갈 동물병원을 알아보다 치료비 차이가 커 깜짝 놀랐다.

퇴근 후 야간에 발생, 야간 진료를 보느라 초진비로 20여만원이 나왔다. 이후에도 김씨는 강아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간격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재진비용으로 검사할 때마다 평균 13만원 가량(엑스레이 4만 4000원·드레싱 8만 8000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검사와 약제비 등에 사용된 돈만 약 100여 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병원별로 100여 만원에서 400여 만원까지 차이가 크다"면서 "반려동물 의료비는 진료비를 100%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별 금액차이의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광주지역 4명 중 1명이 개·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과잉 진료'나 '진료비 과다'를 호소하는 소비자들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나 항목별 진료비 게시 등 반려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2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63만 3582가구 중 15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가구당 1가구 꼴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87만 2628가구 중 18%에 달하는 1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험', '노령견 전문 정보·상담 서비스' 등을 꼽았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나이가 많아질수록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반려견주들의 고민이 엮여 있다.

광주에서도 진료비는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X-ray' 검사는 2만 2000원을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3배에 이르는 6만6000원을 줘야 하는 곳도 있었다. '반려견 건강검진'도 16만원에서 최고는 45만원까지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골절 수술'은 150만~16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혈액검사'의 경우 최저 3만 3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을 오르내렸다.

'1일 입원비'도 3만 3000원~5만 5000원까지 다

양하다보니, '과잉 진료' 혹은 '진료비 과다'라는 보호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만 했다.

동물보험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 민간보험사가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펫보험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보험혜택 또한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보험사 펫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고 발생하기 쉬운 질병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조차 힘들고 막상 들어도 보험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 상품의 가입 가능 연령은 대부분 만 6~8세 정도로 갱신주기는 대부분

1년, 최대 3년으로 3대 질환인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보장 여부가 다르다. 질병 예방을 위한 중성화 수술 등은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의 조경 대표는 "사람 질병의 경우엔 특정 질병에 대한 질병코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가가 매겨지는 반면 동물병원의 경우엔 질병 항목별 진료코드가 병원별로 제각각"이라며 "결국 기준 진료수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으로 반려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욕탕 방역 지켜요" 22일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한 목욕탕 안에서 대화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평상 이용 금지, 목욕시간 1시간 이내 등이 적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권고 사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 법적 대응 나선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상대 형사 고소·5억 손해소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성용(FC서울)이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C씨와 D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기성용을 대리하는 송 변호사는 C씨와 D씨 측에 '성폭력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C씨와 D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기성용이 C씨와 D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결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연합뉴스

## '자동차 리콜법' 현재 판단 받는다

### 현대·기아차, 위험심판 제정

자동차회사가 리콜(제품 결함 발견 시 회수)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계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리콜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처벌 조항인 78조 1호가 위헌인지 현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 조항들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나 부품 제작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 같은 조항이 리콜 요건인 결함 내용에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작년 6월 위헌 심판을 제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연합뉴스

## '어용노조' 직권 취소해 놓고...교섭창구 답 못주는 광주노동청

### 대양판지지회, 결국 소송 제기

### 사측에 "교섭 나서라" 촉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 설립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업장 내 노사 교섭 창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던 노조가 사라지면 향후 교섭 주도권을 어느 노조가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지회(이하 대양판지지회) 회사측 주도로 설립돼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대양판지지노조)를 지난 4일 직권으로 취소한 뒤 향후 노사 교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다.

광주노동청 담당자는 "노동청이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 설립을 취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며 "1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2노조가

승계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노조끼리 별도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 관련 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대양판지지회)의 영향력을 감소,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대양판지지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임직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기업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를 지난 4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사측은 그러나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와의 상계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대양판지지회는 여기에 반발해 22일 오후 광주 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양판지지회 노동자들은 "대양판지지노조가 단체교섭 자격을 상실한 만큼 당연히 단체협약도 무효"라며 "사측은 적극적으로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